2014년 주요업무계획

숲으로 가자!!
LET'S GO FOREST

#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겠습니다.

2014. 2. 24.

산 림 청
KOREA FOREST SERVICE

# 순 서


Ⅰ. 기관 현황 ····· 1

Ⅱ.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 ····· 7

Ⅲ. 2014년 정책여건 ····· 13

Ⅳ. 2014년 주요 업무계획 ····· 19

1.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····· 22

2.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····· 26

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··· 30

4.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··· 34

5.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 ···· 38

6.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····· 42

Ⅴ. 주요 정책 현안 ····· 47

Ⅵ. 기대 효과 ····· 53

# Ⅰ. 기 관 현 황

1. 조직 및 정원

2. 주요 업무

3. 소관 법률

4. 2014년도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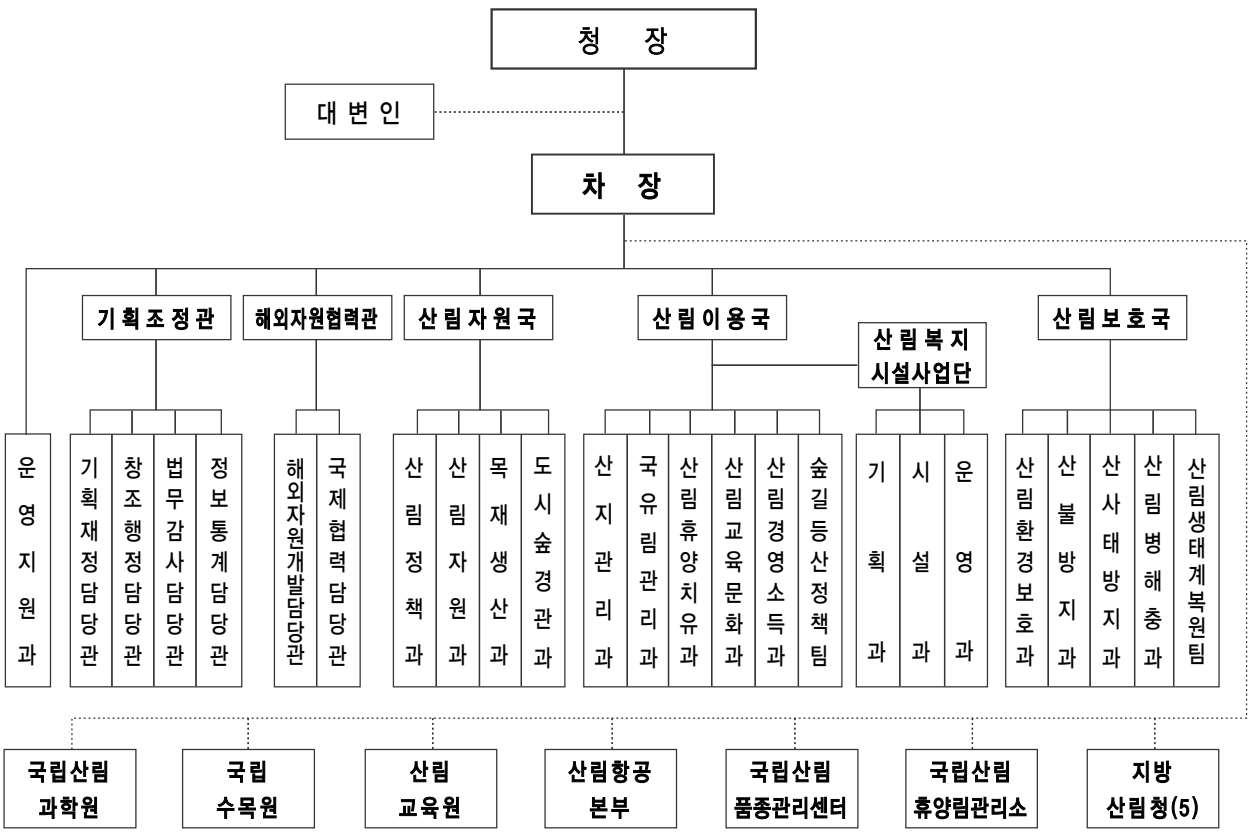
# 1. 조직 및 정원

## ❑ 임 무 : 산림자원·산업 육성, 산림보호, 산림이용·복지

## ❑ 조 직 : 2관 3국 1단 24과 2팀, 11개 소속기관

○ 본　　청 : 기획조정관, 해외자원협력관, 산림자원국, 산림이용국, 산림보호국, 산림복지시설사업단

○ 소속기관 :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수목원, 산림교육원, 산림항공본부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, 지방산림청(5)




## ❑ 정 원 : 1,747명 (본청 275, 소속기관 1,472)

# 2. 주요 업무

## ❑ 본 청

| 구 분 | 주 요 업 무 |
|---|---|
| 기획조정관 | 주요업무계획, 국회, 예산 및 재정성과, 행정혁신, 조직 및 정원관리, 성과평가, 감사, 법령심사, 산림통계, 산림행정 정보화 |
| 해외자원협력관 | 해외산림자원개발, 임산물 수출입·관세 정책, ODA, 임업분야 통상, 국제기구·협약 협상, 양자·다자협력, AFoCO 지원 |
| 산림자원국 | 산림정책·연구조정, 기후변화·산림탄소, 남북산림협력, 일자리 창출, 종묘·조림·숲가꾸기, 목재산업 육성, 목재수급, 산림바이오매스 이용, 임업기계, 임업기능인 양성, 임도, 도시숲 조성·관리, 무궁화 보급 |
| 산림이용국 | 산지관리, 국유림 경영·관리, 산림문화·휴양증진, 산림교육·치유, 숲길조성, 등산지원, 임산물 수급, 임업인 소득 증대, 임업인 육성, 산림경영지도, 산림조합 육성 |
| 산림복지시설사업단 | 백두대간·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, 전시·체험·연구시설 운영 |
| 산림보호국 | 산림생물다양성 유지·증진, 산림보호구역 지정·관리, 산림보호·단속, 백두대간 보호·관리, 산림생태계 복원, 산불방지, 사방사업, 산사태방지, 산림병해충 방제 |

## ❑ 소속기관

| 구 분 | 주 요 업 무 |
|---|---|
| 국립산림과학원 | 산림정책·산림보전·산림유전자원·임산공학 등 시험·연구 |
| 국립수목원 | 산림식물의 수집·보존·관리 및 증식, 광릉숲 보전 |
| 산림교육원 | 산림분야 공무원·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·훈련 |
| 산림항공본부 |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, 산림병해충 항공방제, 산악구조 |
|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|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,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|
|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|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·운영 및 관리 |
| 지방산림청 | 국유림 경영 및 관리, 국유림 확대 및 이용, 산불예방·진화 지원 |

# 3. 소관 법률

| 법 률 명 | 제정일자 | 주 요 내 용 |
|---|---|---|
| ○ 사 방 사 업 법 | 1962. 1.15 | ○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|
| ○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| 1963. 2. 9 | ○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|
| ○ 산 림 조 합 법 | 1980. 1. 4 | ○ 산림 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|
| ○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| 1997. 4.10 | ○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|
| ○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| 2001. 3.28 | ○ 수목원조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|
| ○ 산 림 기 본 법 | 2001. 5.24 | ○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|
| ○ 산 지 관 리 법 | 2002.12.30 | ○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|
| ○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| 2003.12.31 | ○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 |
|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| 2005. 5.31 | ○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|
| 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2005. 8. 4 | ○ 산림자원의 조성·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|
| ○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2005. 8. 4 | ○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·관리에 관한 사항 |
| 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| 2005. 8. 4 | ○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|
| ○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| 2007. 8. 3 | ○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|
| ○ 산 림 보 호 법 | 2009. 6. 9 | ○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·산사태·산림병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|
| ○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| 2011. 4. 4 | ○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|
| ○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| 2011. 7.25 | ○ 국가·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|
| ○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| 2012. 2.22 | ○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·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|
| ○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| 2012. 5.23 | ○ 목재이용 활성화·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|

# 4. 2014년도 예산

## ❑ 회 계 별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2013 예산 | 2014 예산 | 증△감 | %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18,488 | 18,651 | 163 | 0.9 |
| ○ 일 반 회 계 | 8,970 | 9,023 | 53 | 0.6 |
| ○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| 5,838 | 5,981 | 143 | 2.4 |
| ○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| 87 | - | △87 | 순감 |
| ○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| 3,166 | 3,206 | 40 | 1.3 |
| ○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| 427 | 441 | 14 | 3.3 |

※ 2014년 예산(총지출기준) : 정부예산 대비 0.52%, 농림예산 대비 10% 수준

## ❑ 프로그램별

(단위 : 억원)

| 부 문 별 | 2013 예산 | % | 2014 예산 | % | 증△감 | %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18,488 | 100 | 18,651 | 100 | 163 | 0.9 |
| ○ 산림과학기술 개발 | 599 | 3.2 | 640 | 3.4 | 41 | 6.8 |
| ○ 해외자원 협력 | 237 | 1.3 | 237 | 1.3 | - | - |
| ○ 산림자원 육성 | 6,115 | 33.1 | 6,147 | 33.0 | 32 | 0.5 |
| ○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| 4,268 | 23.1 | 4,063 | 21.8 | △205 | △4.8 |
| ○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| 427 | 2.3 | 441 | 2.4 | 14 | 3.3 |
| ○ 산림자원 보호 | 5,300 | 28.7 | 5,697 | 30.5 | 397 | 7.5 |
| ○ 산림행정 지원 | 1,542 | 8.3 | 1,426 | 7.6 | △116 | △7.5 |

## ❑ 집행계획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예산액 (억원) | 상반기 | | 1/4분기 | | 2/4분기 | | 3/4분기 | | 4/4분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계획 | % | 계획 | % | 계획 | % | 계획 | % | 계획 | % |
| 2014 | 16,787 | 9,468 | 56.4 | 4,818 | 28.7 | 4,650 | 27.7 | 3,878 | 23.1 | 3,441 | 20.5 |
| 2013 | 16,639 | 10,183 | 61.2 | 3,844 | 23.1 | 6,339 | 38.1 | 3,244 | 19.5 | 3,212 | 19.3 |

※ 주요 사업비 기준 금액

# Ⅱ.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

## 1 주요 성과

### ❑ (산림육성) 조림·숲가꾸기 등으로 산림 가치를 높이고, 목재생산 확대로 외화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○ **제2단계 숲가꾸기 사업**('09~'13, 125만ha)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원함양 기능 등 **산림의 경제·공익적 가치**를 증진

※ 제2단계 숲가꾸기 효과 : (생산유발) 3조 3천억원, (고용유발) 25천명

○ 작업효율이 높은 **기계화 목재수집 방식**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산재 생산을 통해 **목재 자급률**을 개선

- 자급률 : ('12) 16 → ('13) 17%(외화절감 등 경제효과 약 4천억원)

○ **산림바이오매스** 활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-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목재펠릿 53천톤을 생산하여 원유수입 24천톤을 대체하고, 이산화탄소 73천톤 배출을 저감

### ❑ (산림복지) 생애주기별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

○ 유아숲체험원, 자연휴양림, 치유의 숲 등 세대별 맞춤형 **산림복지 공간을 확충**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

- 산림복지 수혜인구 : ('12) 1,233만명 → ('13) 1,434만명(16.3% 증)

※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.4%가 만족 응답

○ 장애인 등 **소외계층**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

-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(4개소), 사회적 약자 대상 나눔객실 확대(19개소)

○ 임업·목재산업 및 산림복지 분야 등에서 **4천개의 신규 일자리** 창출

- 향후 질 좋은 일자리로 확장 잠재력이 큰 산림치유지도사, 유아숲체험 지도사, 임업기계사 등 전문 자격인력을 새롭게 양성(119명)

## ❑ (정부3.0) 산림정보의 선제적 개방·공유,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예산을 절감

○ 등산로 정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**산림분야 공공데이터** 10종을 선정하여 우선 개방 ('13년 정부 3.0 최우수기관 선정)

- 개방된 정보는 산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개발, 전자 수목도감 등 신규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

※ 등산로·숲길 위치정보는 SK플래닛 등 6개 기관에서 활용함으로써 직·간접적으로 약 2천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

○ 관계부처와 산림교육 활성화 및 병해충 공동방제를 함께 추진하여 **국민 만족도 제고**와 **예산절감** 효과 달성

-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한 숲체험 교육 확대(105만명)
-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해 직·간접적 소요예산 절감(900억원)

## ❑ (규제개혁)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

○ 산업단지 준공기준 등 산지규제 중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**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개선**

-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로 '17년까지 1조원 투자 확대 전망
-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, 노천·광물채광 허용 확대로 투자 불편을 해소(경제효과 약 1천억원)

○ 임업인 등 **정책고객과의 현장소통**을 강화하고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

- 청·차장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(26회)하여 수렴한 47개 건의사항 중 친환경임산물 재배 애로사항 등 33건을 개선 완료 또는 추진 중

## 2 반 성

❑ (산불・헬기사고)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봄철 산불피해가 증가하였고, 산림헬기 추락으로 인명사고 발생

○ 산불 피해면적은 예년(10년 평균)보다 적었으나(71%), 포항・울주 등에서 **동시다발 산불**로 주택소실 등의 피해 발생

※ 산불피해 : (’ 12) 197건, 72ha → (’ 13) 296건, 552ha / (예년) 389건, 776ha

○ 산불 진화작업을 위해 투입한 **산림헬기의 추락사고**로 조종사 등 승무원 인명 피해 발생(사망 2, 부상 1)

※ 「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」을 마련(6월)하여 세부과제를 이행 중

❑ (소나무재선충병) 가뭄 등 기상이변과 피해목 제거 지연으로 인해 재선충병 피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

○ 지자체와 연계한 **선제적 대응이 미흡**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으며, **신규 피해지역도 증가**

※ 피해목 발생 지역 : (’ 12) 48개 → (’ 13) 60개 시·군·구

○ **재선충병 긴급방제 특별대책**을 수립(’13.10)하고, 예비비 확보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통해 피해목 제거에 총력 대응 중

❑ (목재펠릿 부족)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(RPS) 시행 등으로 인해 겨울철 펠릿연료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

○ 비수기 목재펠릿 수매・비축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수요증가에 비해 펠릿연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**국민 불편**을 야기

※ 국내 목재펠릿 소비량 / 공급량(천톤) : (’12) 174 / 174 → (’13) 590 / 584

○ **비상수급팀**을 운영하여 펠릿 부족지역에 적기공급 추진 중

# Ⅲ. 2014년 정책여건

1. 여건전망

2. 정책 추진방향

3. 산림분야 국정과제와
  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

# 1. 여건전망

## ❑ (목재수요)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와 RPS 제도* 시행 등으로 목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

*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 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도(’12년 시행)

○ 치산녹화 성공으로 **나무의 양은 OECD 평균을 상회**하나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으로 **목재 자급률은 낮은 수준**

※ 나무의 양(㎥/ha) : 한국 126, OECD 평균 121 / 목재 자급률(’13) : 17%

○ **경제림 단지**를 중심으로 **집약 관리**하여 생산성을 높이고, 임도·기계화 등 **경영 인프라를 대폭 확충**할 필요

※ 목재수요 전망 : (’13) 28백만㎥ → (’14) 29백만㎥ → (’17) 32백만㎥

## ❑ (산림산업) 청정 임산물에 대한 국민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FTA 등 대외시장 개방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

○ 임산물 생산이 대부분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**소규모·분산 재배로** 이루어져 임업인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실정

※ 임산물 생산액(6조7천억원)은 매년 증가하나 임가소득(3천만원)은 정체

○ 노동집약적인 **1차 산업 위주의 임업으로는 한계**가 있으므로 창조경제를 접목한 **6차 산업으로 발전**시킬 필요

## ❑ (산림복지) 일자리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 증대

○ **산림분야 일자리**에 대한 청·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**산림복지 서비스**를 찾는 **국민수요도 급증**

※ 산림복지 수혜인구 전망 : (’13) 1,434 → (’14) 1,580 → (’17) 2,000만명

○ 구직자 유형에 따른 **장·단기 일자리**의 균형 창출과 **산림복지 서비스의 다각화**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

❑ (산림재해) 봄철 따뜻한 날씨와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한 상황

○ 봄철 날씨변화가 커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며, 지방선거 등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 소홀 우려

※ 기상청에서는 금년 3월 평균기온이 평년(4~9℃)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주요 현안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인력을 총 동원함에 따라 **산불방지 대응능력 감소** 우려

❑ (해외협력) 산림녹화 성공국에 걸맞는 산림분야 ODA 확대와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성 증대

○ **개도국**으로부터 **산림복구 경험·기술 전수**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, **기후변화 대응**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부각

※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) 당사국총회('11, 창원) 시 방글라데시 등 15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녹화기술 전수 등 산림협력을 요청

○ 국제사회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**산림분야 ODA 규모를 늘리고**,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

※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(2조 2,666억원) 중 산림분야는 0.4%에 불과

❑ (북한산림)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북한 산림복구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

○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**통일에 대한 긍정 분위기가 조성**되고 있으며, 이산가족 상봉 성사 등으로 **화해무드 고조**

○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**시범사업** 실시와 지속적 추진을 위한 **법·제도적 기반을 보완**할 필요

※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에 산림복구와 병해충 방제 지원을 수차례 요청

## 2. 정책 추진방향

### ❑ 임업과 연관산업의 융·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

○ ICT·BT 등을 접목·활용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

○ 임업을 6차 산업화하고 목재산업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

### ❑ 산림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대

○ 아이에서 어른까지 세대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
○ 청·장년층 및 여성 등에게 다양한 유형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

### ❑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산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

○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

○ 생활권 도시숲 확대와 산림경관 관리로 국토 생태 건강성 증진

### ❑ 북한 산림복구로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세계녹화 선도

○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녹화 추진

○ 국가간 정상회담 성과를 이행하고 산림녹화를 녹색한류로 확산

| 분 야 | 정책 추진방향 | | 주요 추진과제 |
|---|---|---|---|
| 경제부흥 | •창조임업 실현<br>•산림일자리 확대 | ⇨ | •조림, 숲가꾸기 추진 및 경영인프라 확충<br>•임업의 6차 산업화 및 창업·취업 지원 |
| 국민행복<br>문화융성 | •산림의 안전성 강화<br>•산림복지서비스 확대 | ⇨ | •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, 병해충) 방지<br>•산림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<br>•산림교육·휴양·치유 서비스 및 숲길 확대 |
| 평화통일<br>국제협력 | •북한 황폐산림 복구<br>•해외산림자원 확보 | ⇨ | •북한 산림복구 시범사업 제안<br>•해외조림 확대 및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 |
| 일하는<br>방식 개선 | •규제·비정상 개선<br>•정부3.0 추진 | ⇨ | •규제 및 비정상 관행의 근본적 개선<br>•산림행정 3.0 및 시스템 협업 강화 |

# 3.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

| 국정과제 | 세부과제 | 금년도 전략목표 | 금년도 추진과제 |
|---|---|---|---|
|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[12] | 산림부국 실현[12-4] |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| 1 산림기능에 따른 최적 관리 구현<br>2 산림의 과학적 경영 강화<br>3 산림의 융·복합 활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 |
| | |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| 1 임업의 경쟁력 강화<br>2 목재산업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확대<br>3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|
| | |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| 1 산림을 유아·청소년의 학습·체험 공간으로 제공<br>2 산림을 국민의 대표 휴양·레포츠 공간으로 제공<br>3 산림을 국민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 |
|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[83] | 홍수, 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[83-3] |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| 1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산불·병해충 대응 시스템 구축<br>2 견고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|
|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[110] |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[110-1] | |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증진 |
|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[89] |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이행[89-1] |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 | 1 시장개방과 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 |
| |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[89-3] | | 2 정상회담 성과를 국익 창출 및 국제사회 기여로 발전 |
|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[125] | 「그린데탕트」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[125-1] | | 1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|

# Ⅳ. 2014년 주요 업무계획

# ◈ 2014년 업무추진 체계도 ◈

## 비 전

**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**

## 목 표

**숲을 활력 있는 일터, 쉼터, 삶터로 재창조**

| 산림자원 | 산림산업 | 산림복지 | 산림재해 | 국제협력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치 증진 및 창조임업 실현 |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|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| 재해 안전망 구축 및 산림 건강성 증진 | 해외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|
| 1 산림기능 최적 관리 구현 | 1 임업 경쟁력 강화 | 1 학습·체험 공간으로 제공 | 1 산불·병해충 예방 대응 | 1 FTA 대응 및 해외 자원 확보 |
| 2 과학적 산림 관리 강화 | 2 목재산업 활성화 및 이용 촉진 | 2 휴양·레포츠 공간으로 제공 | 2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| 2 국익 창출 및 국제사회 기여 |
| 3 고부가가치 창조임업 구현 | 3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| 3 힐링 공간으로 제공 |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| 3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|

**추진기반 : 일하는 방식 개선**

비정상의 정상화 / 규제개혁 / 창조경제 / 정부3.0 / 협업

# 1.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[국정과제 12-4]

◈ **기능별 산림관리로 산림을 자원화하고 창조적 활용 확대**

○ 기능별 숲가꾸기 면적 : ('13) 222 → ('14) 246 → ('17) 300천ha

○ 임도밀도 : ('13) 2.8 → ('14) 3.0 → ('17) 3.7m/ha

## 1 산림의 기능에 따른 최적 관리 구현

### ❑ (자원조성) 지역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성

○ 불량 활엽수림을 **경제성 높은 수종**으로 교체(12천ha)하고, 금강·안면 소나무림 등 **지역 특화림**을 확대 조성

- 지역 특화림 : ('13) 998 ha → ('14) 1,270 ha (27% 증)

○ 목재자원, 바이오매스, 특용자원 등 경영목적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**대표수종**을 선정하여 조림 실시

- 황칠나무, 헛개나무 등 식·약용 특용수종 조림 확대(2천ha)

○ 우량 종자·묘목 생산 체계를 정비하여 자원화 기반 강화

- 품질검사 및 규격기준을 개선하여 우수묘목 생산 촉진

### ❑ (자원육성) 현장과 기술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

○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익림을 **기능에 맞게 체계적인 숲가꾸기**를 실시(246천ha)

※ 제3단계 숲가꾸기 계획('14~'18)은 총 139만ha를 목표로 사업 추진

○ 숲가꾸기 사업의 **품질관리**를 강화하고 **감리제도**를 도입

-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성과를 수시로 점검

## 2 산림의 과학적 경영 강화

### ❑ (창의경영) 민간의 자율적인 경영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

○ 경영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'**선도 산림경영단지**'로 선정·육성 ('13 : 3개소, 5,166ha → '14 : 8개소, 8,000ha → '17 : 50개소)

- 산주의 참여도가 높은 1천ha 이상 규모화·집단화된 사유림 대상

○ 경영자를 공모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산림 경영모델 개발

※ 현재 우리숲은 대부분 숲가꾸기가 필요한 30~40년생이며, 10년 후에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기법 필요

### ❑ (기반구축)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임업기술체계 개선

○ 경제림을 중심으로 **임도시설**을 확충하고, 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**구조개량**을 실시

- 임도시설/구조개량 : ('13) 667㎞/625㎞ → ('14) 687㎞/316㎞

※ 임도 밀도(m/ha) : 한국 2.8(' 30년까지 8.5 목표), 독일 46, 오스트리아 45, 일본 13

※ 임도 1km 신설 시 산림작업 비용 30% 절감(임도 2배 확대 시 목재생산량 5배 증가)

○ 산림사업 부실시공, 자격증 대여 등 **현장의 불합리한 문제 집중관리**

※ 산림기술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### ❑ (ICT활용)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관리체계 정착

○ 현장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**스마트 야장**을 확대(5종)하고, 이에 필요한 **모바일 기기**를 확대 보급(100대)

- 산림내비게이션, 음성인식 등 기능 고도화로 사용 편의성 제고

○ **국유림 경영계획구**(40개소)에 대한 **산림사업 이력정보**를 정비하고, 시스템 기반의 경영분석·평가체계를 도입

○ **산림기능구분도** 제작을 사유림까지 확대하고 정밀도 개선

## 3 산림의 융·복합 활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

### ❑ (생명산업)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영역 개척

○ **생명공학기술(BT)**을 접목한 임업의 **첨단산업화**를 추진

- 산양삼테마랜드·약용자원연구소 설립 등으로 BT산업 기반 마련
-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한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·상용화
- 황칠나무, 옻나무, 꽃송이버섯 등 유망품목 활용 R&D 강화

○ 야생화, 유용 곤충자원을 활용한 소재생산, 전시·관광산업 육성

- 야생화, 곤충자원 분포지역을 조사하여 DB화하고 증식기술 개발
- 문체부 등과 협업하여 야생화 탐방 프로그램 등 관광 자원화

### ❑ (산림탄소)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

○ **산림탄소상쇄사업**에 따른 산림탄소 흡수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**산림탄소등록부**를 구축

※ 산림탄소상쇄사업 : 기업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조림,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하여 흡수(상쇄)하는 제도로 '13년부터 시행

○ 탄소상쇄 참여 기업·지자체를 대상으로 **맞춤형 지원 확대**

- 국·공유림을 활용한 사업참여 알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

○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**산림탄소 전문가 제도** 도입

### ❑ (산지축산) 임업과 축산업을 융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

○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축산 **조사료 개발**로 농가부담 경감

- 목질 조사료의 독성제거 기술개발 및 영양분석 연구 추진

※ '12년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격은 '02년 대비 200%, 대두는 198% 상승('12, 관세청)

○ 밤나무 재배지를 활용한 **산지양계 시범사업** 추진

-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AI 극복을 위한 친환경 사육시스템 개발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**장애요인**

**1 조림, 숲가꾸기 사업의 현장관리 미흡**

○ 조림지 사후관리 및 사업 이력관리 저조

○ 산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으로 산주동의에 어려움

**2 소유구조 한계 등으로 사유림 산림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한계**

○ 사유림의 소유규모 영세성 및 기반시설 미비

* 사유림 소유규모 2.14ha, 부재산주 54%(232만ha), 임도밀도 2.8m/ha

**3 산림생명자원 R&D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 창출 부족**

○ 기능성 물질 탐색 등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 연구성과 공유 등의 미흡으로 가치사슬이 단절

**해결방안**

**1 산림사업 내실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**

○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,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후관리 강화

- 사후관리 사업량 확대 및 검측감리 제도 도입

○ 산림사업 이력관리 철저 및 책임실명제 도입

○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산주 동의 절차 준수

- 산주 과세정보 활용, 산림사업 공고제도 개선
- 산주에게 사업실행 결과 등 사업이력 통보 의무화

**2 「선택과 집중」에 의한 사유림 경영구조 개선**

○ 경영면적을 규모화하여 비용 절감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구조로 개선

*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확대 추진 검토

**3 산·학·연 융합형 산림생명자원 연구개발의 집중 추진**

○ 산림생명자원의 유용정보 등 연구성과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잠재적 가치가 높은 산림생명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

# 2.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[국정과제 12-4]

◈ 임산물 및 목재 공급·이용 확대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

○ 목재자급률 확대 : ('13) 17 → ('14) 18 → ('17) 21%

○ 일자리 창출 : ('13) 259 → ('14) 261 → ('17) 290천개

## 1 임업의 경쟁력 강화

### ❑ (6차산업화) 생산·유통개선과 관광결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

○ 잘 가꾸어진 숲과 임산물을 **생태관광 자원**으로 **상품화**

- 지역별로 특화된 수확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접목

※ 울진 소나무숲(걷기·명상 체험), 장흥 표고재배단지(버섯채취 체험) 등

- 대도시 학교·복지시설 등과 자매결연으로 수요기반을 확대

○ 목재와 단기임산물의 **복합생산**으로 임업인 소득을 극대화

- 수종에 따른 복합경영 권장품목(편백나무-산마늘 등) 개발·보급

- 복합경영단지 확충(21개소) 및 시공·감리 도입으로 사업품질 제고

○ 임산물 **유통의 효율성을 제고**하여 가공·물류비용을 최소화

-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종합유통센터 확충(7개소) 추진

### ❑ (경영지원)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소득 안정망 구축

○ 임업후계자 등 **전문 임업인**을 **육성**('13 : 58백명 → '14 : 63백명)하고, **산림경영 컨설팅**과 품목별 **재배기술 지도**를 확대

- 맞춤형 컨설팅(1천회), 현장 기술지도(300천건) 등 지원 실시

○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('13 : 250억원 → '14 : 350억원)

○ 밤·대추 등 주요 **단기임산물 품목별 발전대책** 수립(11월)

## 2 목재산업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확대

### ❑ (목재산업) 국산 목재공급 확대 및 산업체 인센티브 강화

○ '60년대 산림보호를 위해 도입된 **벌채허용 수령(樹齡) 규제를 완화**하여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산주소득을 증대

※ 참나무류 벌기령 완화시(50→25년) **산주수익 4.7배 상승**(176→832만원/ha)

○ 품질이 우수한 목재제품에 대해 **품질인증마크를 부여**하고, 인증제품 생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**실질적 혜택**을 제공

- '14년까지 100개 우수제품 및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인증 추진
- 조달물품 가점부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효과적 인센티브 제공

### ❑ (목재펠릿)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체계 개선

○ **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**(RPS) 확대 시행에 대응하여 목재펠릿 에너지 국가 공급체계를 강화

- 산림 바이오매스 수급전망을 분석하여 이용 기본계획 수립(3월)

○ 국내 펠릿 제조시설 **효율 증진** 및 여름철 **수매·비축량** 확대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**목재펠릿 공급 문제**를 **해결**

- 목재펠릿 수매·비축량 : ('13) 25천톤 → ('14) 40천톤

### ❑ (목재문화) 생활권 목재문화 확산 및 국산목재 이용 촉진

○ 「I LOVE WOOD」 **캠페인**을 통해 목공체험시설·프로그램을 확대

- 목재 체험교실(20개소), 권역별 목재문화 체험장(6개소) 운영

○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목조건축으로 **국산목재의 우수성**을 홍보

- 랜드마크 목조건축을 위해 국유림 원목공급 및 기술자문 실시

## 3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

### ❑ (고용확대) 구직자 유형에 맞는 장·단기 산림 일자리 제공

○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**단기 일자리**(31천개)를 제공하고, 전문성이 높은 **장기 일자리**(5천개) 창출을 추진

○ 산림분야 **전문자격** 인력의 **활동영역**을 더욱 넓히는 한편, 새로운 유망분야에서 나무의사 등 **신규 자격제도** 도입 추진

### ❑ (창업지원) 산림을 활용한 창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

○ 목재생산업 **창업교육 시스템** 도입·운영으로 누구나 **손쉽게 창업**할 수 있는 **열린 산업 생태계** 조성

- '14년까지 창업 희망자 400명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

○ **예비 사회적 기업**과 **사회적 협동조합** 지정을 확대하고, **맞춤형 경영 컨설팅** 지원 등 서비스 제공

### ❑ (기술교육) 청년층을 현장 전문인력으로 양성 추진

○ **산림특성화고** 및 **한국농수산대** 임업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사업과 연계한 기술훈련 및 현장교육을 지원

- 졸업생에게 임업후계자 수준의 경영지원 제공 추진

**창업 성공사례(장흥 헛개)**




-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특허 출원('02, 국립산림과학원 등)
- ㈜생명의 나무 설립 및 기술이전(이전료 9천만원)
- 지역 재배 헛개를 원료로 연 41억원 매출('12)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**장애요인**

**1 임산물 생산·유통시설의 영세화로 수익 창출 미흡**

○ 대부분의 임산물은 소규모 분산재배되고 있으며, 유통·판매체계 및 가공시설의 낙후로 인해 임업인 스스로의 수익창출 역량은 부족한 상황

**2 목재펠릿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 발생**

○ RPS 제도 시행과 가격 경쟁력으로 발전용·산업용·농업용·가정용 등 다양한 수요 급증

- ('11) 6 → ('12) 17 → ('13) 59 → ('14 전망) 100만톤

**3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**

○ 단기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 산림사업법인 등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 유도 필요

**해결방안**

**1 고부가가치 임산물의 규모화된 생산·유통체계 마련**

○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유통·가공시설을 확대하고, 임업인에 대한 선진화된 재배 기술 교육·훈련 제공

**2 목재펠릿 수급 안정을 위하여 공급·유통 대책 강구**

○ (국내생산)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및 수매·비축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량 증대('13 : 67 → '14 : 80천톤)

○ (수입선 다변화) 동남아·러시아·캐나다 등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 유도

○ (유통망 구축) 고품질 국내산 목재펠릿을 농가 주택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유통망 구축

**3 자격제도 및 고용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**

○ 나무의사, 산림탄소관리사 등 산림분야 전문자격 확대

○ 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 및 사회적 기업 등 민간 일자리로 진출 지원

○ 일자리 확대 지원을 위해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설치·운영

# 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[국정과제 12-4]

◈ 잘 가꾸어진 숲을 체험교육, 치유, 휴양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

○ 산림복지 수혜인원 : ('13) 1,434 → ('14) 1,580 → ('17) 2,000만명

## 1 산림을 유아·청소년의 학습·체험공간으로 제공

### ❑ (영·유아기) 숲교육으로 영·유아 창의·오감 발달에 기여

○ 임산부·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**숲태교** 프로그램 제공

- 병원·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명상·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○ 유아교육기관과 협업으로 연간 65만명의 유아에게 **숲교육** 제공

- 체험·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**유아숲체험원**(8개소) 조성

※ 수목원, 휴양림 등 157개소에서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만명 수혜(' 13)

### ❑ (청소년기) 산림교육 확대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도모

○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**'숲으로 가자!'** 캠페인 전개

- 교육부·여가부와 협업강화 및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 운영(205개소)

※ 숲으로 가자! : 청소년 인성을 위한 숲교육 활성화 캠페인(' 13, 105만명 참여)

○ 청소년 전문 산림교육 공간으로 **산림교육센터**(2개소)를 조성

- 가족관계 회복, 인터넷 중독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**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**

| 출생기 | ⇨ | 유아기 | ⇨ | 청소년기 | ⇨ | 청년기 | ⇨ | 장년기 | ⇨ | 노년기 | ⇨ | 회년기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숲태교프로그램 | | 유아숲체험원 | | 산림교육 숲체험 | | 숲길, 산림 레포츠 | | 자연휴양림, 도시숲 등 | | 산림치유 | | 수목장림 |

## 2 산림을 국민의 대표 휴양·레포츠 공간으로 제공

### ❑ (청년기) 캠핑·산림레포츠 및 걷기 문화를 활성화

○ 캠핑, 산림레포츠 등 **새로운 산림휴양 수요**에 적극 대응

-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시설의 정의 및 **시설 기준 마련**
- 조성 전 사전 **타당성평가**와 **인증제도** 도입으로 사후관리 철저

○ 명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**전국 숲길 네트워크**(150㎞)를 구축하여 걷기문화를 선도하고, 건전한 **산행문화**를 확산

- 안내센터(15개소), 숲길체험지도사(236명), 산악구조대(747명) 등 운영

※ 등산 역사와 문화를 교육·전시하기 위한 국립산악박물관 개관(10월)

### ❑ (장년기)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귀산촌 지원

○ 다양하고 차별화된 **산림휴양공간** 및 **생활권 녹색쉼터** 확대

- 지역별로 특색있는 **자연휴양림**(19개소), **산림욕장**(5개소) 조성
- **도시숲**(217개소), **가로수**(531km) 조성 및 **도시녹화운동** 전개

※ 도시숲 조성·관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

○ 컨설팅, 교육 등을 통해 은퇴자, 귀촌자의 **산촌 정착 지원**

- 정주체험·기술교육 등 귀산촌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

○ 산림복지 서비스 진흥과 장기체류가 가능한 **산림복지단지**를 조성하기 위한 **제도적 기반 마련**

○ 장애인 등 **사회적 약자**에 대한 산림휴양 활동 지원 강화

- 취약계층에 대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할인(30%), 다자녀 가정 입장료 면제 등 맞춤형 산림휴양프로그램 운영 확대

## 3 산림을 국민의 힐링공간으로 제공

### ❑ (노년기)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

○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국·공유 **산림치유 인프라**를 확충

- **치유의 숲** : ('13) 21개소, 80억원 → ('14) 25개소, 144억원

※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(' 10~' 15, 1,379억원 / 영주 · 예천)

- 예방의학적 전문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6만명에게 제공

○ 산림치유 **전문인력 양성**(320명) 및 자격제도 개선

- 산림치유 전문인력 활동 확대 등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
-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시간 조정 및 자격요건 완화 등 **규제 개선**

### ❑ (회년기) 수목장림 확대 등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

○ 국·공유 **수목장림** 인프라 확대 및 민간 수목장림 조성 지원

- 국유 수목장림 면적 확대(10 → 30ha), 공유 수목장림 조성(1개소)
- 장기·저리 융자, 숲가꾸기 산림사업 우선지원 등 민간지원 확대

○ 수목장림의 건전한 운영·관리 및 **작은장례 문화** 확산

- **불법 수목장림 특별단속**으로 산림훼손 및 유가족 피해 사전 예방
- **수목장림 활성화** 방안 마련 및 범국민적 **수목장 실천운동** 전개

**장성 치유의 숲 조성 우수사례**



- 故 임종국 선생이 평생 가꾼 779ha 편백림
- 대기 오존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토양 내 지오스민은 136.1㎍/㎏로 가장 높음
- 330천명 방문, 72억원 수익 창출(' 13)

* 지오스민(geosmin) : 흙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초조·불안감 완화 효과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**장애요인**

**1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차별화 부족**

○ 유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

○ 학교폭력 피해학생,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나 일반프로그램과 차별되지 못함

**2 산림복지 관련 민간시장 창출 및 산업화 연계는 미흡**

○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 창업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고용에 한정

※ 숲해설가는 10개월 고용, 46,000원/일의 임금

**3 수요 증가추세인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 시설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시설기준 부재**

○ 난개발과 무분별한 시설확장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

**해결방안**

**1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보급**

○ 유아숲체험원(8개소), 산림교육센터(2개소) 조성 및 자연휴양림, 수목원, 국민의 숲 등 기존시설 적극 활용

○ 산림교육전문가 자격간 중복 교육과목 인정 등 제도 개선

○ 학교폭력 피해학생(심리안정), 다문화가정(사회융합) 등 계층별 목적에 맞는 맞춤형 특수프로그램 개발·보급

**2 산림복지전문가 산업화 기반 마련**

○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,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근거를 마련

○ 민간시장 창출 및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

**3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법적근거, 시설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**

○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 중('13.12.27, 국회 김재원 의원 발의)

# 4.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
## [국정과제 83-3, 110-1]

◈ 산불·산사태·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

○ 산불·산사태 피해면적을 예년(10년 평균) 대비 10% 감소

○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143만본 전량 제거(4월말까지 완료)

## 1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산불·병해충 대응 시스템 구축

❑ (산불대응)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및 신속 진화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

○ **감시인력**(23천명)을 봄·가을철 **산불조심기간에 집중 배치**하고, 위험 시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운영

- GPS 활용 산불신고단말기(14천대) 및 감시카메라(952대) 설치·운영

○ **산림헬기**(42대)를 **30분 이내에 현장 도착**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계화진화대(193개) 및 광역특수진화대(9개)를 운영

❑ (병해충방제) 재선충병은 피해목을 전량제거하고,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은 적기방제로 산림건강성 유지

○ 재선충병 **방제전담조직을 보강**하고, 피해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**항공방제를 확대**하여 확산을 차단

○ **민·관 및 부처간 협업**을 통해 주택,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관리

- 민간컨설팅 확대를 통한 맞춤형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

※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 컨설팅 : ('13) 4,052회 → ('14) 5,000회

## 2 견고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

### ❑ (예방강화)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

○ **산사태 취약지역** 지정을 위한 **실태조사**를 지속 추진

-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자 실태 DB 구축 등 집중관리

※ 취약지역 실태조사 : (’13까지) 14,201개소 → (’14추가) 10,000개소

○ **현장예방단**을 확충하여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

- 산사태 현장예방단 : (’13) 25개단, 100명 → (’14) 50개단, 200명

○ **산사태정보시스템을 고도화**하여 실시간 산사태위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기능을 강화

-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강우 데이터 고도화
-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산사태 현장 상황관리시스템 운영

### ❑ (사방사업)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

○ 주택, 도로변 등 **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**에 우선 추진

- 사방댐/계류보전 : (’13) 785개소/584㎞ → (’14) 899개소/584㎞

※ 국토부와 협업으로 고속도로변 산사태우려지역에 사방댐 신규 조성(31개소)

○ **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자문**으로 사방사업의 조기·견실시공

- 대상지 선정·설계·시공 단계별 현장기술자문 및 체계적 모니터링

○ **대규모 땅밀림**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지역의 사전복구 추진

- 땅밀림 산지(7개소)에 대한 정밀조사·복구 및 기복구지(21개소) 모니터링

##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증진

### ❑ (복원·보호) 백두대간, DMZ 일원, 도서·해안 등 핵심 생태축 복원과 보호지역 관리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

○ 핵심생태축의 **산림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**(50ha)하고, 단절된 능선구간을 생태적으로 연결하여 생태축 기능 회복

- 독도, 울릉도 등 주요 도서지역의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

※ 백두대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적 보호지역 등재 추진

○ **산림보호구역** 유형을 현실에 맞게 조정(5→3종*)하고, 지정·해제 심의 및 지역주민 보전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

* 산림유전자원, 수원함양, 공공생활(생활환경, 경관보호, 재해방지)

### ❑ (현지내·외보전)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, 주요 산림생물종의 발굴 및 보전관리 강화

○ 기후대 및 권역별 **국립수목원 확충**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

- (중앙 : 세종) 기본설계, (백두대간 : 경북 봉화) 공사 4년차

○ 한반도 **희귀·특산식물** 수집·보전을 강화하고, 표본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생물다양성 중점지역(hotspot)을 분류

- 공·사유림 산림습원 조사 실시(108만ha), 기후변화 취약식물 보존 및 적응사업 추진(159종)

※ 산림생물다양성 중점지역 : 산림생물적 고유성·다양성·희귀성 등이 아주 높고 생태적 자연성과 특이성이 두드러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림지역

○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내 **정원산업의 활성화** 방안을 강구·추진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**장애요인**

**1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 미흡으로 재선충병 피해 급증**

○ 우화기 이전 피해목 미제거 및 인위적 이동으로 피해 확산

**2 인위적 산불 발생과 산사태 현장예방에 대한 대응력 부족**

○ 산불위험시기 논·밭두렁,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
- 논·밭두렁, 쓰레기 소각은 산불발생의 26%차지(10년평균)

○ 전담인력 부족으로 산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

**3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미흡**

○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나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

**해결방안**

**1 '14.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**

○ 방제인력 집중 투입 및 홍보 확대로 인위적 확산을 차단

○ 지자체별 재선충병 방제성과 평가 및 포상(패널티) 부여

**2 소각산불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및 산사태 현장 대응인력 보강**

○ 맞춤형 교육, 홍보, 실적관리, 포상 인센티브, 평가제 도입

○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확충하여 취약지역 점검 등 예방조치
- ('13)25, 100 → ('14)50, 200 → ('17까지)290개단, 1,160명

**3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**

○ 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정원(庭園) 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

# 5.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
## [국정과제 89-1·3, 125-1]

◈ **해외 산림자원 개발로 자원영토를 확장하고, 글로벌 산림 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**

○ 해외 조림 면적(누계) : ('13) 31 → ('14) 34 → ('17) 44만ha

○ 북한 산림복구 : ('14) 시범사업 제안 → ('17) 복구사업 본격추진

## 1 시장개방과 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

❑ (FTA대응) 한-중 FTA 등 임업분야에 민감한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임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

○ **임산물의 민감성을 반영**한 협상 대응으로 임업인 피해 최소화

○ 임산물 **수출 특화지역을 육성**(20억원)하고, 농업 분야와 협업으로 **EU, 중국 시장을 개척**하여 수출을 확대

- 임산물 수출 : ('13) 410백만$ → ('14) 450백만$(10%증)

❑ (자원확보)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여 목재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배출권의 선점 기반을 마련

○ 동남아, 중남미 등 투자지역을 다변화하여 **해외조림**을 확대

○ 해외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**정책자금 지원을 확대**하고, **해외 산림자원 전문가 양성**을 위한 인턴 증원

- 융자지원 / 해외인턴 : ('13) 230억원 / 25명 → ('14) 250억원 / 33명

○ 인도네시아에서 **REDD+ 시범사업을 실시**(3월, 14천ha)하고, 대상 국가를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확대

- 환경부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REDD+ 기여 추진

※ REDD+ : 개도국의 산림 전용·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

## 2 정상회담 성과를 국익 창출 및 국제사회 기여로 발전

### ❑ (국제신뢰)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

○ **산림휴양·생태관광** 종합계획 수립 지원(인도네시아) 및 **우호의 숲 조성 사업** 추진(베트남) 등으로 해외자원 협력 기여

○ **아랄해 유역 복원 사업** 약정체결 추진(카자흐스탄, 7월)

※ 아랄해 : 90%가 고갈된 세계 4대 내륙호수로 환경재앙의 대표적 사례

### ❑ (국제협업) 국제기구와 협업으로 녹화기술을 개도국과 공유

○ FAO와 **산림경관복원 협력체계** 마련을 위한 약정 체결(6월)

○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(10월, 평창)에서 **산림경관 복원 이니셔티브 채택**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

○ 한-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**산림장관회의를 개최**(12월)하고, AFoCO 회원국을 범아시아 지역으로 확대

※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: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산림분야 국제기구

### ❑ (ODA) 사막화 방지 등 지구환경보전 사업과 더불어 수원국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이행

○ 몽골·중국에서 황사 및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추진(446ha)

○ 사막화 방지 사업을 몽골에서 **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대**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

-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 : ('13) 가나 등 3개국 → ('14) 페루 등 7개국

○ 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협업하여 **산림분야 ODA 사업**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**협력대상 국가**를 확대

- 양자협력국가 : ('13) 28개국 → ('14) 30개국(캐나다, 핀란드 추가)

## 3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

### ❑ (북한 산림복구사업 제안) 시범조림 및 병해충 방제 지원

○ 북한의 긴급지원 요청에 대비하여 **우수 종자·묘목**을 확보

- 시범조림사업에 필요한 종자 생산(3톤) 및 양묘장 운영(3개소)

※ ’17년까지 사방용 및 유실수에 대해 종자 26톤과 묘목 200만본 확보

○ **소규모의 시범사업**을 통한 사업성과를 토대로 협력 확대

- 「그린데탕트」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조림·병해충 방제사업 추진
-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

### ❑ (민·관협업)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성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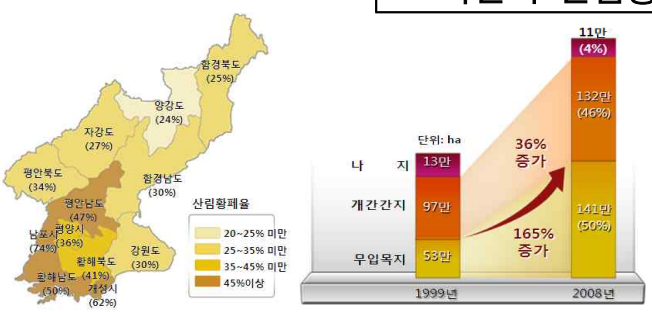
○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, 대북지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(가칭) **‘북한 산림복구 지원단’**을 구성

- 민간단체의 기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전수 및 자문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

○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**FAO 및 국제 NGO와의 협업**체계 구축

※ 산림청은 FAO와 협력하여 개도국(북한 포함)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A/R CDM, REDD+ 능력배양 사업을 진행 중(’09~’16)

**북한의 산림황폐 현황**




- 황폐산림은 284만ha로 전체 산림(899만ha)의 32%를 차지하며 무입목지와 개간산지가 증가 추세
- ’13년 위성사진 표본조사결과 개간산지가 나지로 전환되는 등 황폐 심화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**장애요인**

**1 한-중 FTA 협상에 따른 임업분야 경쟁력 약화 및 임업정책에 대한 임업인들의 신뢰도 저하 우려**

○ 임업분야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-중 FTA 협상이 올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

○ 임산물 생산자별로 상이한 이해관계 조율 체계가 미흡하고 임업인의 막연한 불안감 팽배

**2 성과 도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체계 미흡**

○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에 애로가 예상

○ 상대국 특성을 고려한 녹화기술 전수체계 정리 미비

**3 단편적 지원으로는 북한 황폐산림 복구 성과 창출에 한계**

○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민간의 단편적 물자 지원에 그쳐 사업성과 미흡

**해결방안**

**1 전략적 협상 대응 및 품목별 임업인과의 소통 강화**

○ 임산물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한-중 FTA 협상에 참여하고,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

○ FTA에 따른 임업분야 대책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산물 품목별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, 현장 소통을 강화

**2 성과 도출 기반의 국제협력 추진 체계 마련**

○ 국회 대응, 예산 항목 조정 등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강화

○ 우리의 녹화기술을 상대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전략 수립

**3 민·관 협업체계 구축과 북한의 수용성 제고**

○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연료림 조성 연계 등 수용성 높은 시범사업 모델 제시

# 6.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

◈ **산주, 임업인은 물론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산림분야 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해 경제 활성화 추진**

○ 규제개선 : ('13) 25 → ('14) 30 → ('17까지) 150건

○ 공공 데이터 개방 : ('13) 10(13) → ('14까지) 32(42) →('17까지) 57종(74%)

## 1 비정상의 정상화

### ❑ (정상화) 산림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

○ 「**산림청 정상화 제안 검토협의회**」를 구성·운영하여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 과제는 **'14년에 반드시 정상화 완료**

- 범부처 국민제안 웹사이트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

※ 내부 업무망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자체 정상화 과제를 병행 발굴

○ 정상화 과제 **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 이행 성과 중 국민생활 개선과 밀접한 과제는 **집중 홍보** 추진

### ❑ (공공기관 개혁) 자발적 혁신과 운영 효율화로 역량 강화

○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**공공기관 윤리경영** 추진

- 임원연봉 하향 조정, 경조휴가일수의 공무원 수준 축소 등

○ 일하는 방식과 **사업추진 체계를 개선**하여 성과 제고

- (임업진흥원) 현장임업을 위한 지원 확대,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
- (녹색사업단) 녹색자금 사업 자부담제 도입 등 사업추진 체계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해외산림사업 민간진출 기반 조성

## 2 산림분야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

### ❑ (규제발굴)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 및 민·관 파트너십 구축

○ 임업(기업)활동 장애요인, 애로사항 등을 찾기 위해 **'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규제개혁'** 및 **'인터넷 규제개선 신문고'** 운영

-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끝까지 관리하기 위해 **'규제개선과제 은행'** 운영

○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소통 강화를 위해 **'산림청 민·관 규제개혁위원회'** 구성·운영

### ❑ (투자활성화) 기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 산지규제 개선 추진

○ **산지분야 규제완화**를 통해 **관광·의료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**의 민간 **투자활성화 유도**

- 관광·산업단지 개발시 중간복구 및 의료 부대시설 설치 허용

※ C사 일반산업단지(192ha)의 경우 현행 '17년 사업개시가 가능하나, 중간복구 허용 시 '15년 조기사업 개시로 경제효과 143억원, 연고용 533명 창출 가능

○ **산지 관련 허가·지정 권한 위임**을 통한 절차간소화 등 기업투자 **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개선**

- 산지전용 허가기준(평균경사도 등)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

※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시 행정절차 소요기간 약 2개월 단축 가능

### ❑ (신성장 동력)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면적규제 완화

○ 현행 **3만㎡ 미만인 산지면적 편입제한 규제**를 개선하여 청정·재생에너지인 **풍력 시설의 개발·이용** 촉진

- 재해·경관 및 복구 등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「산림 내 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」 마련 후 관련 규제 완화

## 3 산림행정 3.0의 성과 확산

### ❑ (성과창출) 산림행정3.0 본격 추진으로 국민 체감 제고

○ 모든 산림정책·서비스를 **국민 맞춤형**으로 재설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**선도과제**를 선정하여 성공사례 창출

- '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' 등 10개 선도과제 집중 추진

○ 국민 생활과 밀접한 **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** 확대로 창업 아이템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- IT 기업 대상 설명회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

### ❑ (소통강화) 임업인 만남 기회 확대 및 협업 활성화

○ 임업인 등 정책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「**산림분야 소통·체감 100℃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**」을 지속적으로 추진

- 단순 현장 방문을 지양하고, 빈발·유사 민원 분석 등을 통해 사례별 문제해결이 가능한 현장토론 과제 및 대상지 선정

○ 국민안전 및 생활 개선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**협업을 강화**하여 **현장 대응력** 및 성과 제고

- 산림재해(안행부, 방재청, 기상청), 산림복지(문체부·복지부·지자체) 등 각 분야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시스템 구축

### ❑ (ICT) 임업인과 산주를 위한 산림 정보서비스 확대

○ 맞춤형 조림지도, 입지토양도 등 14종의 산림주제도를 통합·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**임업인 맞춤형 서비스** 제공

○ 국유림 경영에 활용 중인 **스마트 산림경영시스템**을 공·사유림으로 확대 보급하여 디지털 산림경영 촉진

## 4 범부처 협업과제 추진

### ❑ (산림교육 활성화) 유아·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부·여가부 등과 정책 연계를 강화

○ **자유학기제**(교육부), **방과 후 아카데미**(여가부)와 연계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을 확대(120만명)

- 학교폭력 가·피해자 치유 등 대안교육의 대표모델로 정착

○ 계층별·주제별 **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** 개발·보급

- 연령·목적 등 교육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차별화

### ❑ (산림병해충 공동방제) 부처 소관지역 내 산림 병해충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방제 추진

○ (농식품부·농진청) **과수원 등 농작물 재배지역** 인근 산림의 병해충을 우화시기에 맞춰 선제적 방제를 추진(5~9월)

○ (환경부) 참나무시들음병 등 특정 병해충 피해가 심한 **국립공원**에 대한 원인 진단 및 방제인력·장비 지원

○ (문화재청·국방부) **문화재보호구역, 군사보호구역** 내 피해가 심한 병해충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공동방제 실시

### ❑ (건설현장 임목 활용) 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활용 확대

○ 개발사업 발주(국토부), 폐기물 재활용(환경부) 등 유관부처와 협업으로 **훼손 대상 임목 80%이상을 활용** 추진

※ 연간 2,415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($CO_2$) 1,055천톤 저감 기대

○ 권역별 **나무은행**을 통해 조경수·원목자재 등으로 선별 활용

## 별 첨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

| | |
|---|---|
| 장애 요인 | **1 정상화 과제의 자체 발굴에 소극적인 자세 견지**<br>○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<br>**2 국민이 원하는 규제를 선별·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응 미흡**<br>○ 규제개혁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담당자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<br>**3 저작권 등의 분쟁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및 정보공개 제약**<br>○ 저작권·소유권 등 분쟁소지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,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장애요인 발생 우려<br>**4 뚜렷한 성과목표 부재로 주관 협업과제의 추동력 상실 우려**<br>○ 기관간 윈-윈 성과 창출 미흡으로 협조부처의 참여 저조 |
| 해결 방안 | **1 정상화 과제의 적극적 발굴·추진 시 인센티브 제공**<br>○ 연말 표창·포상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<br>**2 규제개혁 민·관 파트너십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**<br>○ 산림청 민·관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심의로 담당자 부담 해소<br>**3 분쟁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의 소유권 조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**<br>○ 분쟁소지가 있는 데이터는 조사·분석을 강화하고,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개방<br>○「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준」을 마련하고 교육 실시<br>**4 금년도 가시적 협업과제 성과목표 제시 및 강력 추진**<br>○ 기 구성한 협업 T/F를 중심으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|

# Ⅴ. 주요 정책 현안

1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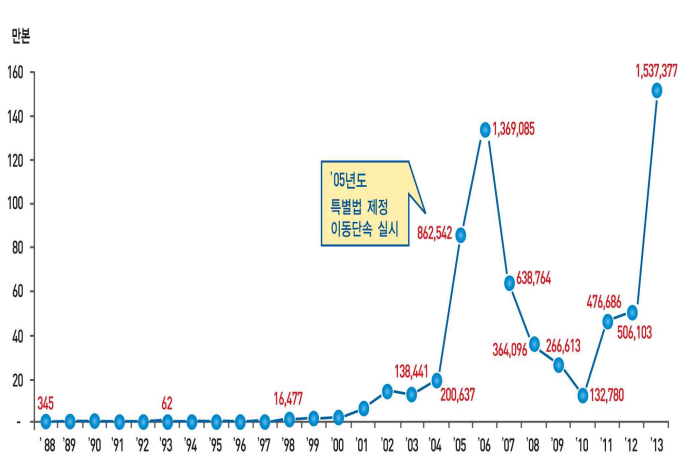
2. 봄철 산불 방지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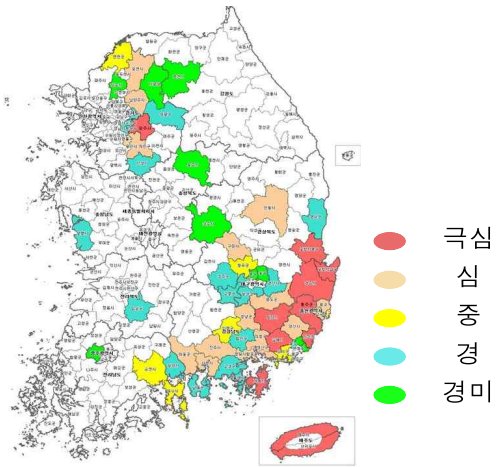
# 1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

## 1 피해현황·원인 및 추진경과

❑ (현황) '88년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 고사목이 686만본 발생

○ 피해가 발생한 **60개 시·군·구**에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**4월까지 고사목 143만본을 제거**할 필요(2.20일까지 57만본 제거)




❑ (원인) 고온현상·가뭄 등 **기후적 요인**과 고사목 존치 및 피해목 이동 등 **인위적 요인**이 결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

○ 매개충 활동이 증가하고 재선충병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

❑ (추진경과) **재선충병 긴급방제 특별대책** 수립·시행('13.10월~)

○ **방제 현장의 지도·감독**을 위한 **전담조직** 구성·운영

○ '14.4월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해 방제예산 확보 지원

- '14년 방제예산 : 562억원(지방비 포함 시 682억원)

## 2 향후 방제계획

### ❑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피해고사목을 적기에 제거

○ 헬기와 GPS장비를 활용한 예찰로 **피해목을 100% 조사**하고, 지역별 피해유형에 맞는 **맞춤형 방제전략**을 마련

○ 피해 고사목을 **1차로 '14. 3월말까지 제거**하고, 추가 발생한 고사목은 정밀예찰을 거쳐 4월말까지 전량 제거

○ 방제대상 **고사목이 3만본 이상**인 지자체는 **특별관리**

※ 특별관리지역 : 부산(기장), 울산(울주), 경북(포항·경주), 경남(창원·사천·김해·밀양·거제), 제주(제주)

### ❑ 피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성과 점검을 강화

○ 피해 집중지 및 선단지를 중심으로 매개충에 대한 **항공·지상 방제를 확대** 실시(3회, 31천ha → 6회, 62천ha)

○ 생활권·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는 **예방 나무주사** 실시(4천ha)

○ 피해고사목 집중 관리와 홍보 확대로 **인위적인 확산을 차단**

○ 사후 모니터링과 **방제성과 평가**를 실시하여 **재발생을 최소화**

-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실적(5월), 재발생률(11월) 평가 및 결과 공개

### ❑ 방제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·운용

○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에 전담인력 확보 및 방제인력 집중 투입

- 지자체 자체 전담인력(53명) 외에 안전행정부 증원 인력(24명) 배치
- 일일 평균 인력 7천명을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28천본을 제거

※ 피해 극심지역은 3월까지 집중방제를 위해 타 지역 방제인력 1,100명 투입

# 2. 봄철 산불 방지 대책

## 1 금년도 봄철 산불 전망

❑ 봄철 따뜻한 날씨와 지방선거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

○ 올해는 전국 동시지방선거(6.4)로 산불 경각심 이완과 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**현장 대응역량 분산이 우려**

※ '13년에 발생한 산불 296건 중 봄철이 84%(3월이 113건으로 최다)이며, 금년 2.20일 현재까지 74건, 15ha 산불피해 발생

## 2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❑ **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**(2.1~5.15 → 1.29~6.8)하고, 위험시기별로 **맞춤형 특별대책**을 마련·시행

○ 산불감시인력(23천명)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,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(316개)하여 위험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

○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고, **소각금지기간**을 철저히 운영(3~4월)

※ 논·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(40%)이 '13년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

❑ **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고도화**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적지에 **산불방지시설**을 확대 설치

○ **산림헬기**(42대), **인력 진화대**(기계화 193대, 광역특수 9대) 등 보유자원을 **신속하고 안전한 산불 진화**를 위해 최대한 활용

○ 주요 등산로에 감시카메라(952대), 소화시설(23개소) 등을 운영

※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: 산불위험예보, 산불신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, 감시카메라, 등산로 개방·폐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

# Ⅵ. 기 대 효 과

# 임업인과 국민을 위한 산림정책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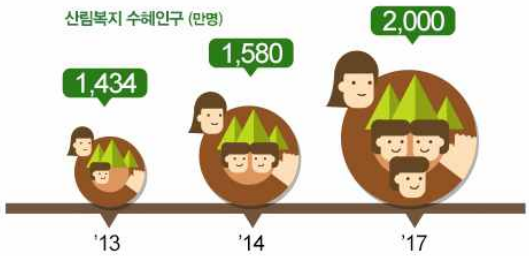
## 1 우리의 든든한 일터, 산림

청·장년층 대상 산림전문일자리
(산림기술자, 숲해설가 등)가 늘어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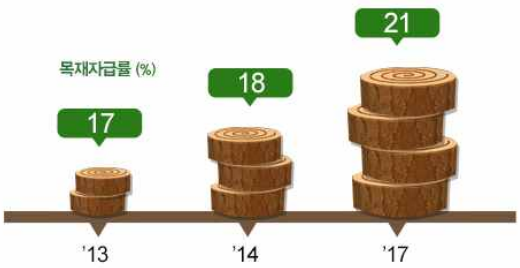

## 2 숲은 국민을 위한 쉼터

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
수혜인구가 더욱 확대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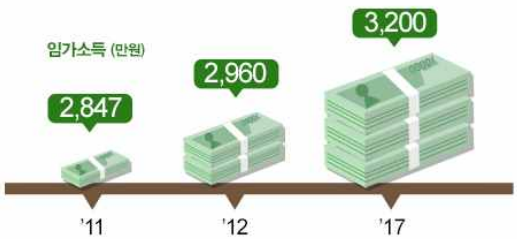

## 3 우리 숲이 제공하는 친환경 목재

국산 목재 자급률이 개선되어
목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.




## 4 아낌없이 주는 나무, 커가는 임가 산림

산림현장에 창조적 임업을 적용하여
임업인의 소득이 올라갑니다.




## 5 산림재해는 줄이고, 국민안전은 높이고
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
산림재해(산불·병해충·산사태)가 줄어듭니다.




## 6 세계 녹화로 녹색 한류 확산

우리 산림녹화 기술로 훼손된 개도국 산림이
복원되고, 해외 조림 영토는 넓어집니다.

